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 인터넷생중계 : <http://assemtv.cb21.net>

● 트위터 : <http://twitter.com/#!/chungbuk/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날인),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우편 :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cb21.net>의 「진정/민원」에 글쓰기
- 팩 스 : 043) 220-5159

방청안내

■ 방청권 교부

-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

여름, 저녁 무렵의 시

냇둑에 선 미루나무 길게 누운 수면 위
단내 껌던 하루 해 물비늘로 스러지고
한 움큼 달맞이꽃도 잔잔하게 피어납니다

쨍싸게 배치기하여 뛰어오르는 피라미 떼
후두둑 소낙비로 떨어지는 자리 자리마다
등글게 파문이 일던 소란스러움 똑, 그쳐

그림자 넉넉히 깃든 순한 산줄기 휘감아
한 켜 더 깊숙이 초록으로 쟁이는 물빛
메아리 울려 퍼질까, 물수제비 띄워 봅니다.



노영임(盧英任)

- 충북 진천 출생
-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조 당선(2007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진예술가 지원금 수혜(2008)
-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장학사

Contents

2012. 07. Vol 217



진흙 속에 뿌리 내리고
이제 꽃대를 올릴 때다
연꽃 향내 가득 피울 때다
푸르른 시간들을 가둔 씨방
그 속에 여름날도 머물어 간다

- 4 충북도의회 2년 의정활동 결산
- 7 「전반기 진단과 과제」 의정 토론회
- 8 충북도 1회 추경예산안 의결
- 10 청주·청원 통합 확정
- 11 참여와 소통 강화 - 시민단체와 간담회
- 12 각 상임위원회 활동
- 19 도정질문
- 24 주요 처리의안
- 26 5분 자유발언
- 28 의정활동 이모저모
- 31 의정일기





충북도의회 전반기 2년 의정활동 ‘활발’

회기 21차례... 의안처리 · 의원발의 조례 역대 최다

현안 적극 대처 – 집행부 견제 강화 – 열린의회 추구

충청북도의회 제9대 전반기 의회(의장 김형근)가 6월말로 마무리됐다.

도의회는 지난 2년 동안 모두 21차례의 회기에 245일간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상시의회를 추구해 비회기 중에도 각 상임위별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전반기 의회 기간 중 의안처리는 모두 362건, 위원회 및 의원발의 조례 건수는 117건, 진정처리는 34건이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312건, 건의사항 484건을 처리했다. 이 같은 안건 처리는 역대 어느 의회보다도 많은 수준으로 ‘도민을 섬기는 열린의회’를 기치로 내건 전반기 의회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였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구하면서 도민들을 찾아 나선 ‘현장의회’는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적극적인 지역현안해결 노력, 전국 최초 초·중학생 무상급식과 도립대학 반값등록금, 소외계층 지원책 마련, 집행부 견제 강화 방안 제도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특위활동 등 여러 분야의 성과도 주목받고 있다.

대체적으로 9대 전반기 의회는 지방의회 최초로 현장의회를 여는 등 참신성과 시민사회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 등 소통노력, 집행부 견제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역대의 회 가운데 가장 진일보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

무차 독립 방안, 의정비 인상 등은 사전에 지역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됐다가 비판 여론에 부딪혔으며 맹목적인 당리당략에 치우쳐 대립각을 세우는 것등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9대 전반기 의회의 분야별 추진 내용을 정리한다.

각종 지역현안 해결 위해 '앞장'

도의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사수'를 위해 민·관·정 연석회의를 제안해 도민운동에 횃불을 당겼다. 또 시·군의원들과 함께 국회 앞 쫓기대회, 서명운동, 청와대 방문 등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청원군 유치를 위해 앞장서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도정 현안으로 부각된 국립암센터 오송분원 유치를 위해 도의회는 국회와 정부기관을 방문하여 도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전했으며 2011년 9월에는 충청권 3개 시·도 의회 공동으로 '충청권 대토론회'를 개최해 오송 입지의

당위성을 확인했다. 올 3월에도 도의회와 청주시, 청원군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암센터분원 백지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 최초 무상급식 이끌어내

2010년 11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간의 비용부담 문제를 중재해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이끌어낸 것도 큰 성과다. 도의회는 무상급식 정착을 위해 도와 교육청이 합의하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교육복지 차원에서 충북도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지원예산을 승인했으며,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근로능력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와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해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보듬어 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2년,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김형근 의장

도의회 의장직은 분명 과분한 직책이었지만, 명예롭게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그동안 따뜻한 비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 부활 20주년, 지방의회 개원 60주년을 맞이한 제9대 의회에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매우 높아 무척 조심스럽고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살아야 민주주의가 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확신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지방자치를 이끌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충북의 미래를 위한 최선책을 찾기 위해 편하고 쉬운 길 대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느라 때론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생기와 의욕으로 가득찬 제9대 의회의 전반기 의정활동이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쉽없이 내달려온 지난 2년을 뒤로 하고, 이제 평의원으로서 돌아가 현장에서 도민과 늘 함께하며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든든한 일꾼으로서 진심되게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시간은 어김없이 흐르고 계절은 순환하여 태양이 작열하는 여름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도민들에게 보다 시원하고 상쾌한 소식들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형근

전통시장 보호·소규모 학교 지원

올 2월에는 도의회 제안으로 청주·충주·제천시의회 의장과 청원군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시·군의장단 연석회의를 열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시·군의장단 연석회의에서는 대형마트와 SSM에 동일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합의하는 등 지역상권 보호에 앞장섰다.

또한 교육부가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국 처음으로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해 통폐합 위기를 맞고 있는 소규모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구현

도의회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도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해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도민 의견 수렴을 제도화 했으며 언제라도 도민들의 도정참여와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는 모든 본회의에 대해 인터넷 생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민들이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한 쌍방향 소통에도 적극 나서는 등 도민과의 교감과 소통의 문을 활짝 열었다.

집행부 견제 강화 방안 제도화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강화와 제도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도의회는 회의규칙을 개정해 결산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변상,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해당기관은 시정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해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행정사무감사 조례도 개정해 선서 미이행과 자료 미제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확대했으며, 감사 기간도 10일에서 14일로 연장, 집중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추천권 확보와 개방형 전문위원 충원, 매월 주요 현안사업 도정브리핑제 시행, 본회의 시 실국별 주요업무보고, 5분 발언에 대한 서면회신 의무화 등을 정착시켰다.

흑룡강성~청주공항 항공기 취항

의원외교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도의회는 흑룡강성 인민대표대회와의 우호교류 10주년을 맞아 오송 차이나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 투자와 흑룡강성~청주공항 간 항공기 취항 협력 등 5대 과제를 제시해 협력을 이끌어 냈다. 그 결과 올 1월부터 청주공항과 중국 하얼빈을 오가는 전세기가 주 1회 취항하게 됐다.

6월에는 기업인들과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흑룡강성 대표단이 우리 도를 방문해 오송 바이오밸리 역세권 개발과 민간투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추진하도록 했다.

현장의회·지역 균형발전 추구

지난해에는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의정사상 최초로 도의회 본회의장을 벗어나 충북 옥천에서 본회의를 열고 각 계각층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제천과 괴산에서는 현장 상임위원회 회의와 지역균형발전 토론회를 열어 지역 균형발전의 당위성을 부각시켰다.

상시·현장의회 실현을 위해 도의회는 비회기중 상임위원회 현안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구제역 방역초소 봉사활동 및 시·군 상황실을 찾아 격려하기도 했다.

세종시 정상추진 특위 활동 성과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도 활발했다.

특위는 활동 결과 2010년 10월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세종시시설치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해 노력했다.

조기제정을 요구한 특별법은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 사무의 범위는 광역자치단체 기능 수행, 관할 구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편입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한 관련법 개정으로 세종시 건설에 도내 건설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왕성한 입법활동·열린의정에 높은 평가

“의원 전문성은 높이고 내부 소통은 강화해 나가야”



▲ 6월 22일 도청대회의실에서 제9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진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다.

충청북도의회는 충북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6월 22일 충북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의원, 시민사회단체, 의정참여단, 충북도청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도민 등 15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9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2년간의 도의회 성과를 되짚어 보고 향후 활동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의정토론회에서는 도의회 박문희 운영위원장의 전반기 활동보고와 충청대 남기현 교수의 기초발제가 이어졌다.

이어 충북지방자치학회장 이장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성일 의정참여단 대표, 송재봉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엄재천 충북일보 정치부장, 오진섭 충북도청 정책기획관, 구명회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참여해 전반기 도의회의 성과와 향후 의정활동 방향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박문희 운영위원장은 전반기 운영성과 보고를 통

해 “9대 도의회는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의회의 위상제고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량을 강화시켰다”면서 “도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의정 실현과 상시 현장의회 구현, 의원 전문성제고와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남기현 교수는 전반기 의회 성과로 간담회·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한 도민과의 소통부문, 도정질문 1문1답 방식 도입, 왕성한 입법활동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의원들에게 지방분권 운동가로서의 자세 확립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강화를 주문했다.

토론자들도 전반기 의정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제정된 조례의 이행여부 확인 △의원들 간의 소통 강화 △실제로 도민들에게 필요한 조례 제정 △남부·북부권에서 의회 개최 △도정질문 시 요지 명료화 등 다양한 내용을 주문했다.

충청북도 1회 추경예산 3조 3,259억원

모두 12건, 23억 8,397만원 삭감해 예비비에 편성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서 추경·건의문 등 처리

도의회는 지난 6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충청북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지역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3건의 건의문을 채택하고 조례안을 처리했다.

충북도의 1회 추경은 당초예산 3조 1,209억원 보다 2,050억원이 늘어난 3조 3,259억원으로 편성됐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 오송 컨벤션센터 건립비 15억원 등 모두 12건에 23억 8,397만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증액했다.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조 8,015억 9,456만원보다 2,459억 3,149만 6천원 증액된 2조 475억 2,605만 6천원이다.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천원)

회계별	예산안	최종확정액	증감(계수조정)
계	3,325,913,993	3,323,530,018	△2,383,975
일반회계	2,868,411,188	2,866,051,833	△2,359,355
특별회계	457,502,805	457,478,185	△24,620

※ 삭감액은 예비비로 다시 편성했으므로 전체 예산액은 변동 없음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천원)

회계별	예산안	최종확정액	증감(계수조정)
계	2,047,526,056	2,046,858,297	△667,759
특별회계	2,047,526,056	2,046,858,297	△667,759

※ 삭감액은 예비비로 다시 편성했으므로 전체 예산액은 변동 없음

지역현안 해결 촉구하는 건의문 3건 채택

충북 경제자유구역 조기지정 - 무상보육비 국비지원 등

311회 임시회에서는 1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충북 경제자유구역 조기지정 촉구 건의문 △영·유아 무상보육 및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 △고속철도 민영화 추진 재검토 촉구 건의안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경제자유구역 조기지정 촉구 건의문에서 “충북도는 2007년부터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착실히 준비하였음에도 정부는 지난 6월 5일 ‘경제자유구역 추가 후보지’ 선정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일정조차 밝히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는 159만 충북도민이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땀 흘린 노력을 우롱한 처사로 도민 모두는 큰

안타까움과 좌절감을 겪고 있다”면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차질 없이, 그리고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영·유아 무상보육 및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에서는 국회와 정부의 일방적인 0~2세 무상보육비 증액으로 지방비 부담을 하지 못해 하반기부터는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추가소요액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급식도 교육에 포함된다며 초·중학생 무상급식비를 국비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속철도 민영화 추진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서는 “국토

해양부가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분으로 수서발 경부·호남 고속철도(KTX)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주기 위한 민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민영화

가 될 경우 요금인상, 사고위험 증가, 지역 적자노선의 축소와 폐지 등 심각한 문제 유발과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도 우려 된다”며 민영화 재검토를 촉구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지정 촉구 건의문

충청북도는 국가 미래전략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기 위해 충청도의회 의원 모두는 159만 충청북도민을 대표하여 이명박 대통령님과 관련부처에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차질 없이 그리고 조속히 지정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과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6월중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즉각

개최하여 ‘추가 후보지’를 선정하라.

하나, 2010년 2월 이명박 대통령께서 우리 도 방문 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2012년 6월 22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정부지원 확대 건의문

첫째,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지방재정을 압박하지 않도록 추가 소요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할 것.

둘째, 0~2세 보육대상 확대는 물론 각종 복지사업 시행에 따른 복지수요 발생 시 지방재정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는바, 해당 사업의 시행 초기에 소요재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

셋째, 헌법정신에 따라 완전한 의무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무상의 범위에 급식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의무교육 대상자 급식 경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 할 것.

2012년 6월 22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고속철도 민영화 추진 재검토 촉구 건의안

KTX 민영화는 결국 철도산업 전체의 민영화로 진행돼 재벌기업과 외국투기자본의 돈벌이 각축장으로 변모해 국민의 보편적 교통기본권을 위한 공공성이 완전히 저해될 수밖에 없음.

해당 기업은 KTX만 운영해 커다란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공기기업인 철도공사는 적자가 심화돼 공공철도 교통체계가 붕괴되고 말 것임.

정부는 유일한 철도 흑자노선인 KTX의 노선·지역 독점의 특혜적 운영권을 넘기는 재벌특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된 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건의함.

2012년 6월 22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청원·청주 66년만에 통합 마침내 하나됐다

도의회 환영 성명, 통합절차 이행 등 적극 지원 천명

마침내 청원·청주가 전국 최초로 주민주도로 자율통합을 이뤄내 66년만에 하나가 된다.

6월 27일 청원·청주 통합을 위한 청원군 주민투표 결과 통합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 18년 동안 진행돼 온 청원·청주 통합 추진이 4번째 도전 끝에 종지부를 찍었다.

청원·청주 통합 확정에 대해 충북도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으며 앞으로 통합절차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도의회는 민선 5기 출범 후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가 밝힌 통합 원칙에 공감하고 지난 2년 여간 통합추진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왔다.

도의회는 지난 3월에는 「청주·청원 통합추진 공동협의회」에 참여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4월24일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와 시민협의회가 상행발전 방안을 담은 5개 분야 39개항 75개 세부사업에 대해 합의하자 기자회견을 열어 지지 입장을 천명했다.

또 4월 30일에는 청원·청주통합 의견 수렴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찬성의견을 모아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간담회에서도 의견을 모을 수 있지만 통합에 대한 충북도의회와 확고한 의지를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본회의를 열었다. 이어 도의회는 충북도,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청원·청주통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도의회는 청원·청주통합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통합법 제정과 상생발전 방안 이행, 통합시 출범을 위한 준비, 통합시 발전 청사진 마련 등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청원·청주 통합주민운동본부 회원들이 27일 청원군 내수읍 사무실에서 행정구역 통합 찬반 주민투표 개표결과 찬성이 과반을 넘어 통합이 결정되자 환호하고 있다. <충청투데이 제공>

청주·청원 통합 결정 환영 성명서

청주·청원 통합결정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6월 27일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신 청원군민과 통합의 한 축인 청주시민의 의견을 의회의결로 모아 주신 청주시의회에 경의를 표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그동안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노력해 주신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청주·청원 '통합 가결'로 중부권 100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4월 29일 전체의원 만장일치로 통합찬성 의견을 가결해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청원군 주민투표를 결정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주·청원 통합시민협의회와 군민협의회가 합의한 39개 사항의 세부사업들이 실행되고 통합에 따른 일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2012. 6. 28.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참여와 소통,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한다

도의회, 19개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 개최

도의회가 지난 5월 18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청주경실련, 충북여성연대, 청주 YWCA, 청주 CCC 등 19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는 지난 2010년 9월 13일 처음 개최한 이래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간담회는 거버넌스의 주체인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참여와 소통,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공조,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충북여성연대 권은숙 사무국장, 충북장애인부모연대 민용순 대표,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안건수 대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선영 사무국장, 충북여



▲ 충청북도의회는 5월 18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성연대 강경희 대표의 정책제안 발표가 있었다.

지역차원 학교폭력 예방·근절 방안 모색

도의회 교육위, 유관기관과 토론회 열어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미애)가 지난 5월 24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관계자, 지방경찰청 관계자, 학교 교직원, 학부모, 도내 교육관련 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근절 정책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청소년 학교폭력예방재단 SOS지원단 이유미 단장의 '최근 학교폭력 실태와 현황으로 본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고, 이어 최미애 위원장의 주도로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유형근 교수, 충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과 김돈영 과장, 충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김용균 여성청소년계장, 청주교육지원청 Wee센터 박옥주 정책위원장, 학부모가족 강정수 씨,



▲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월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광명시 교육혁신지구 모니터요원 김수정 씨 등 모두 8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의회운영위원회

(제310 · 311회 임시회)

충청북도 위원회 조례 개정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문희)는 제310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현안을 심사·의결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5월 18일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6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열어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도정질문과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운영위원회 사전 간담회에서는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해 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을 명확히 하고자 상임위원회별 실·국 변경안을 협의하고 앞으로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해 제312회 임시회 회기 중에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상임위원회 실·국 변경안 협의내용은 여성정책관실(행정문화)과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산업경제)을 정책복지위원회로, 감사관실(정책복지)과 충북문화재단(신설)을 행정문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충북개발연구원

(정책복지)을 충북발전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6월 12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제311회 임시회 회기 중에도 두차례 운영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을 심사·의결했다

6월 12일 실시한 운영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 의결했다.

그리고 6월 22일 실시한 운영위원회에서는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7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열기로 하고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201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후반기 의석배정 협의의 건은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안에 대해 협의했다.



▲ 6월 12일 간담회를 갖고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 등을 협의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10·311회 임시회)

자활기관 용자 확대, 활성화 지원



▲ 6월 12일 오송 화장품 뷰티 세계박람회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고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심기보)는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충주의료원에 대한 현지방문과 자문위원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장선배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심의 기능을 도청의 실·국장 위주로 구성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복지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복지위원회로 이관해 기금관리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했다.

자문위원 간담회에서는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하고 타 시도 사례와 우리 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내실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추가 자료수집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한 5월 15일 충주시 안림동으로 이전한 충주의료원 개원식에 참석해 주요시설과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고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는데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제311회 임시회에서는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영·유아 무상보육 및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적절한 시책추진과 사업수행 경비지원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종전 1억원이던 자활사업기관의 점포 전세자금 용자한도액을 2억원으로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거나 예산액 대비 사업의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등 3건 3억 8,820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했다.

심사과정에서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 총예산이 개최장소 변경에 따라 당초 2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증액된 점, 구체적인 예산집행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점, 국비확보 문제 등을 지적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10 · 311회 임시회)

학교폭력 예방 사업근거 마련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병운)는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유완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도지사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 시설 개선·확충, 장애인선수 육성을 포함한 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토록 했고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사업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또 장애인 전문체육 활동의 저변확대와 선수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장애인 운동경기부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인체육 동호회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본 조례 제정은 장애인 체력증진을 통한 삶의 질 제고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체육사업 추진의 큰 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어 도민의 문화공간으로 조성중인 (구)관사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제출한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중복부분을 통합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문화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향으로 수정하여 의결했다.

또한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에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추진토록 했으며 그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또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폭력 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해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수립과 자문 등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신고·상담에 응할 수 있는 긴급전화를 지방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관련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본 조례에 대해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확히 하여 학생 인권보호와 자라나는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했다.

의원발의 4건과 도지사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했다.



▲ 5월 10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 청주시 외남동과 청원군 내수읍 원통리 일원에 있는 항공정비단지(MRO) 조성사업 부지를 방문 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10 · 311회 임시회)

경제자유구역 조기지정 촉구



▲ 5월 10일 충주 장안농장을 방문하여 류근모 대표로부터 친환경 유기농 쌈 재배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봉희)는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항공정비복합단지(MRO) 조성,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충청북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경제통상국과 간담회를 개최, 이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2건의 조례안 심사와 충주 친환경 유기농쌈채시설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5월 9일에 경제통상국과의 간담회를 통해 도 주요 현안사업인 「MRO산업 및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확대」 등의 추진상황과 계획을 청취하고 이들 사업이 도의 경제규모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철저한 계획수립을 통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10일에는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전국 최고의 친환경 유기농 쌈채시설인 충주 장안농장을 방문해 충청북도의 친환경 유기농업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지정 촉구를 건의하고 도정질문과 5분자유 발언을 통해 도정현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전달 했으며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조례도 심사 했다. 김종필 의원과 윤성옥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 산정의 투명성 확보와 충주의료원 부지매입의 신속한 처리에 관해 도지사와 관계 국장들에게 질문 했고, 정헌 의원과 김희수의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용배수로 예산확보 및 단양소방서 설치에 대해 건의했다.

5월 13일에는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지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정부에 대해 추가지정 후보지 선정을 요구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3건 520,100천원을 삭감하고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제310 · 311회 임시회)

고속철도 민영화 재검토 요구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권기수)는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문의~대전 간 도로확포장공사, 하석지구 붕괴위험 지역 정비공사 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문의~대전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2006년 12월~2015년 12월에 걸쳐 총사업비 1,612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로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해 우기대비 터널 내 변위계측 등의 위험요인, 작업자 및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준공 시까지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차질 없는 시공을 주문했다.

하석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는 붕괴위험이 있는 사면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의원들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임을 강조하고 조속히 준공해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의가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수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천읍내 초등학교 증가지역에 학교건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에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교 수용 시설

확충에 진력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에도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고속철도(KTX) 민영화추진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추경심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사업은 오송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으로 무계획적 사업추진, 청주시·청원군 재원분담, 민자유치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고속철도(KTX) 민영화추진 재검토 촉구 건의안」은 국토해양부에서 수서발 경부·호남 고속철도 KTX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주기 위해 민영화 방안을 추진하는 정책으로 이를 추진할 경우 요금인상, 사고위험 증가, 지역 적자노선의 축소·폐지 등의 심각한 사태가 우려돼 건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 대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제정을 통해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 화재로부터 도민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 5월 17일 문의~대전 간 건설 중인 도로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보고받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제310·311회 임시회)

학교폭력 예방대책 토론회 개최



▲ 5월 9일 괴산 보광초등학교 백마폐교를 방문해 괴산중평교육지원청 관계관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최미애)는 제310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2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2011~2015 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을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5월 9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심의에 앞서 괴산 보광초 백마폐교를 방문해 관계관으로부터 백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과 백마폐교 활용방안을 보고받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5월 10일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도교육청이 제출한 2조 475억 2,605만 6천원의 예산 중 7억 6,775만 9천원을 삭감해 수정가결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을 당부했다.

그리고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2014년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5월 24일에는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지방경찰청 관

계자, 각급학교 교사,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과 실효성 있는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6월 13일 실시된 제311회 임시회에서는 최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촌지역 작은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확대하는 사항을 전국 최초로 법제화하는 내용의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병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최진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 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고,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 간 소요인력 배치 등을 우선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심의를 보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10 · 311회 임시회)

충청북도·교육청 1회 추경 심사



▲ 6월 18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희)는 5월 15일 제310회 임시회기 중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2조 475억 2,605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3.7%인 2,459억 3,149만 6천원이 증가된 규모이다.

제출된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2012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했고, 세출예산은 국가시책사업과 학교신설 및 이전,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을 뒀다. 의원들은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총 2건에 6억 6,775만 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했다.

또한 6월 18일 제311회 임시회 중에도 예결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실시했다.

도지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050억원이 증액된 3조 3,259억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가 1,898억원(7.1%) 증액된 2조 8,68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7종으로 전년도 보다 152억원(3.4%) 증액된 4,575억원이다.

이번 종합심사에서 특별회계는 충북도립대학 캠퍼스 조정개선 공사 1억 2,462만원 중 2천 462만원을 삭감했고, 일반회계는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지분참여 타당성 조사연구 5천만원 중 2천만원, 청남대에서 계상한 역대 대통령 주간 지정 운영 사업비 1억원 중 7천만원, 오송생명과학단지(첨복단지) 개발 실시계획 변경 용역 6억 5,131만원과 오송 컨벤션 센터 건립 1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따라서 도지사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 2,050억원 중 총 12개 사업 23억8,397만 5천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함으로써 충청북도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050억원이 증액된 3조 3,259억원으로 확정됐다.

6월 22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 이광희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뒤 이를 통과시킴으로써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외국인주민 도정참여 정책

[질문] 외국인주민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외국인주민들의 도정참여를 위해 어떤 지원과 노력을 했습니까?

[답변] 외국인주민들의 사회 적응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및 이주여성 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했고 외국인 주민들의 자원봉사 또는 명예홍보 대사 등으로 도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문] 외국인주민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본격적 의미에서 자치행정 참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답변] 현재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협의회나 위원회에 외국인주민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관련

[질문]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현재 설치돼 있습니까?

[답변] 현재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유사한 다문화정책실무협의회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질문] 지금까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있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외국인에게 주민들과 동등한 생활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직접 산하기관을 통해 관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기초로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소개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답변] 총 48개 과제의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56억원을 지원하고 49개 과제의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81억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목표, 중점과제 등 지원시스템

[질문] 충청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46%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 목표나 중점과제와 지원 시스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 차원에서 권익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질문] 최근 진천 외국인근로자 숙소 화재사건과 중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등의 문제는 충청북도의 작은 지원과 현재 조례의 현실화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같은 문제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NGO정책

[질문] 충청북도에 외국인을 위한 NGO에 지원하는 정책은 있습니까?

[답변] 이주여성쉼터는 국비가 70% 지원되기에 매칭으로 지방비 30%를 지원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에서 별도의 국비 지원이 없는 분야는 도 차원에서 별도로 지원하거나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질문]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계속 늘어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외국인근로자 지원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외국인근로자 지원 업무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인력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1회 임시회

도정질문 · 답변



김종필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적정성

[질문] 도시가스공급 확대가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공급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공급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는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 공급비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고 있겠지요?

[답변] 공급비용은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도에서 전문용역기관에 일반적으로 공인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기고 그것을 도에서 검토를 하고 소비자분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적정원가는 우리 공급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이 적정원가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20~30% 사이가 됩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표준적 인원수를 산출해야 하는데 지금 인원 수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도에서 자율적으로 한 부분이 아니고 지식경제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식경제부와 그런 정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협의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 영업비용 중 지급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한 20%에서 30% 전후가 됩니다. 지급수수료란 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가인데 공급가구 수가 2010년도에는 전년 대비 7.9%가 늘었고 2011년도에는 1만 6,187가구로 4.9%가 늘었지만 이 지급수수료는 2010년도에는 무려 100%가 인상이 됐고 2011년도에는 50% 가량이 인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서비스 지급수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죠?

[답변] 전년도에 말씀하신 지급수수료의 증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새롭게 하고 있지만 전문가

관에서 충분히 회사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가스회사 기부금 조성 관련

[질문] 영업비용중 기부금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부라 하면 기업이 기업의 이윤을 가지고 기업 명의로 기부를 하는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 기부금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우리 충북도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답변] 현재 저희가 비용 적정원가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판매량 예측 문제

[질문] 실제 판매량이 예측판매량보다 많으면 도시가스사가 이익이 되고 또 예측판매량이 많게 되면 사용자인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이익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매년 도시가스사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공급비용에 지금 예측을 하고 있지요? 이 사항에 대해 생각해보셨습니까?

[답변] 도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하 노력

[질문]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대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시고 철저한 원가 검증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도시가스의 공급사의 독점으로 도민의 피해가 심각한 지경입니다.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모든 자료는 다 공개를 할 수가 있고요, 원가 검증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철저히 검증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과점체제 문제는 현행법상 어려워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제31회 임시회

도정질문 · 답변

윤성옥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충주의료원 이전 동기와 목적

[질문] 충주의료원 이전 동기와 목적,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 합니까? 또한 현재 주변 약국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답변] 충주의료원을 이전하게 된 배경은 구의료원이 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주의료원 현대화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쾌적하고 또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은 현재 한곳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에 약국이 더 생길 예정이고 그러면 불편 없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주의료원 편의시설 및 인력 문제

[질문] 주위 정비나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원할 때는 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둘러 개원해야 될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충주의료원 신축이전사업은 BTL 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이 시설운영은 실시협약서 제39조에 의해서 준공확인이 되면 다음 날부터 운영사가 비용을 투입하게 돼 있습니다. 또 보다 나은 의료환경 속에서 주민들에게 진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서둘러서 했다가보다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의료진 보조 인력이 부족하여 여러 불편사항과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방법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실 충주의료원은 타 병원에 비해서 관리 인력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인력증원에 따른 비용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우선 현 인력으로 운영을 해본 후 향후 의료원의 경영 상태를 감안해 인력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충주의료원 부지 사용계획

[질문] 구 충주의료원 부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구 충주의료원 부지로 인해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답변]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충주시가 지역주민과 접촉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충주시에서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의 정제된 의견을 개진하고 저희와 협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구 충주의료원 부지 매각 방안

[질문] 8~9년 전 감정평가를 100억으로 추정한 것은 당시에 주먹구구식 추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원 비용 총당을 20억을 부풀리면 의료원을 옮기는데 다른 비용이 20억이 덜 들어간다 이런 의미에서 감정가를 부풀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저희들 보통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면 탁상감정이라고 하는 개략적인 감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에 의해서 개략적인 예상치를 뽑아 어느 정도 위아래 편차를 두고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적정한 지가는 전문가들이 65억 플러스 마이너스 10% 알파가 적당한데 82억 4,000만 원에 공매를 했으니 응찰자가 없을 수밖에 없지요. 그 돈은 그저 우리가 필요한 희망가격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격을 20%정도 낮춰 공매를 속히 진행하시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응찰자가 없으면 감정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서 공매를 하시든가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 관련법에 있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 의견을 최대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제311회 임시회

도정질문·답변



강현삼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균형발전 추진정책 관련

[질문] 우리 도의 균형발전 추진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시·군간 권역간 접근성 개선 사업으로 충청내륙 고속화 도로 등 도로교통망 확충, 심야(출퇴근) 버스 운영 등이며 권역별 종합발전계획 수립으로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종합발전계획, 중원문화권특정지역개발, 낙후지역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확대(제천, 단양 포함)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 및 전략사업 추진 남부, 북부 출장소개청, 남부3군 과학영농특화지구 조성 등 입니다.

[질문] 각종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현황과 추진성과는 무엇입니까?

[답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 25개 사업지구 추진 및 단양과 제천을 포함시켜줄 것을 국토부에 신청예정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 4개 분야 29개 사업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안 수립 중 : 2012년 8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 제1구간 기본설계 용역 중 △심야(출퇴근) 버스운영 : 5개구간(청주↔제천, 영동, 대소, 괴산 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지속적 확대 △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마무리 : 987억원(2007~2011년) △충청내륙고속화 도로 건설 등 도로·교통망 확충 △남부·북부출장소 집무의 날 운영, 심야버스 운영 등입니다.

민선 5기 기업·투자유치

[질문] 충청북도 전체 및 시군별 투자유치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 도 전체 투자유치실적은 8조 305억원, 시·군별 투자유치실적은 충주시 1조 5,142억원, 청원군 2조 7,849억원, 진천군 1조 4,282억원 등 입니다.

[질문] 투자유치 기업의 실제 투자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 민선 5기 총투자유치 실적은 8조 305억원이며, 실투자 실적은 3조 729억원(30.7%)입니다.

[질문] 시군간 편중된 투자유치실적의 격차 해소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기업에서는 이전시 수도권과의 접근성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선호 하나 우리 도에서는 기업유치 상담시 우선적으로 투자 유치가 불리한 성장촉진지역(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투자진흥기금(60억)으로 공유재산 확보 후 기업에 매각 추진하며 성장촉진지역은 보조금 지원 시 도 지원 확대하고 있으며,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보조금을 지원 합니다.

광역특별회계 관련

[질문] 광특회계 전반적인 운영현황은 무엇입니까?

[답변] 광특회계는 부처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광역발전계정과 포괄보조형식의 지역개발계정이 있는데 지역개발계정은 자치단체별로 매년 배정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시도자율편성사업' 및 '시·군·구자율편성사업'이 있습니다. 시도자율편성사업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 지역별 개발수요 및 소요 재원,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신청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광특회계 운영에 있어서 시군간 형평성 유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시도자율편성사업에 대한 시·군간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시·군별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사업을 선정·지원합니다. 또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서 정한 낙후지역에 매년 별도의 재원(시도자율편성사업 한도액의 5%정도)을 마련해 배정합니다.



제311회 임시회
도정질문 · 답변



장선배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청주·청원 통합 관련

[질문] 통합시 특별법 제정과 통합이행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통합추진 로드맵은 무엇입니까?

[답변] ‘통합시 특별법’ 제정 방법은 효율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결정할 것이며 통합시 특별법(안)의 마련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통합이행위원회의 설치 운영은 통합시 특별법에 근거한 ‘통합시 조례’에 위원회의 권한 및 구성·운영방안 등을 명시해 청주·청원 상생발전방안 합 의사향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군 농업지원 대책

[질문] 통합으로 인한 농업부분 투자 감소 등 위축 개연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청원군지역 농업지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계속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사업비 70억원 규모의 옥산면 소재지 정비사업과 37억원 규모의 고운매 전원마을 조성사업, 30억원 규모의 청남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을 13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지역 특색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예산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통합 결정시 정부지원 확대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방자치법 등의 규정에 의거 통합 시 구청을 현재 2개구청에서 4개구청으로, 국은 현재 4개국에서 5개국으로 증설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매년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광특회계사업 국고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여 정부의 자원배분에서 우대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및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참여 확대 방안

[질문] 청원군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답변] 청주시와 청원군에 주소를 둔 공공기관 65개소와 100인 이상 기업체 117개소 총 182개 기관과 기업체에, 주민투표일인 6월 27일날 투표를 위한 출·퇴근 시간 조정과 중식시간 투표참여 등에 관하여 이미 협조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질문] 통합시 발전 청사진 마련을 위한 로드맵과 도의 지원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 통합시의 발전을 위한 법령상의 지원 외에 전문가 토론회, 주민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통합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통합시 발전 청사진과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통합 관련 교육분야 대책

[질문] 통합시의 교육업무 추진 조직과 직제, 인력배치 등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답변] 통합되는 지역교육청은 현행 2국 6과 체제이나 2013년 1월 1일부터 2국 범위 내에서 과·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 기구의 설치기준’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지역교육청 기구 개편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질문] 통합시 일반계고 평준화 및 인접지역 학군 설정 문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답변] 통합초기에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향후 통합시의 도시발전계획 청사진이 수립되고 행정구역별 주민 거주 분포 등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중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장선배 의원)

- 사회복지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위해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기금 심의를 대행

2014년도 친찬음성 혁신도시 내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충북 친찬음성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의거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일원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3,500여 세대 입주예정으로 원아수 140여명 규모의 단설유치원 신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10급 계급체계를 일반직과 동일한 9계급 체계로 개편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충북문화관의 활용, 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 규정
-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 운영·관리 규정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 유안백 의원)

- 장애인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해 장애인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체육 진흥사업 추진 등을 위한 장애인 체육진흥 및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부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하고, 「백마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라 보광초등학교 백마폐교를 처분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정지숙 의원)

-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청남대 입학료 면제조문 신설
-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등 도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의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입학료 할인 규정 신설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종필 의원)

- 충북테크노파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기본재산의 조성 등을 명시하는 등 관련 조례안을 체계화함으로써 조례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세종특별자치시 편입지역의 학교 식재(4개교) 및 청원군 오송읍 설치로 인한 관할구역 위치 변경 사항 등을 반영(8개교)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희수 의원)

- 각종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정비단지(MRO) 조성사업 예정부지 내에 국방부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자 국방부가 요구하는 부지를 매입 및 국방부에 양여
- 국방부 소유 부지를 양수 받아 MRO단지를 조성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영주 의원)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 진흥재단”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삭제

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김봉희 의원)

- 도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지역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로컬푸드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부강중학교의 2012. 7. 1. 세종특별자치시 편입에 따라 청원군 부강중학교를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중학교로 편입, 청원군 중학구에서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 보완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영주 의원)

-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 및 복무사항 정비하고, 교향악단 공연 관람료의 감면 범위를 수정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대표발의 : 김도경 의원)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해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박문희 의원)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강현삼 의원)

- 도내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선진복지도 실현
- 진폐로 추정되는 산재불인정 받고 있는 도내 진폐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추진

주요처리 의안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양희 의원)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절차 마련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복잡한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

충청북도 자활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손문규 의원)

- 기금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사업별 지원조건 등을 명시해 자활사업 활성화와 기금에 대한 전문 심의 기능을 강화해 기금 운용 관리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유원백 의원)

-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충청북도청사부설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정지숙 의원)

- 충청북도 병역명목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사용료 감면 조문 신설, 도민대상 수상자에 예우를 위해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2013화장품 뷰티박람회 및 국제바이오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할 회의장 및 전시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건립 중인 CV센터의 컨벤션기능을 보강
- 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오송에 컨벤션 센터를 건립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NGO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NGO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최진섭 의원)

- 충청도교육청의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이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함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충북도 장학시설인 '청람재'와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의 시설물 명칭을 도민들이 유사성으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2012. 7. 1.자 본청 기구 개편으로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신설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의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권기수 의원)

-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 대하여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고 주택화재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대표발의 : 장병학 의원)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 교직원에게 교육과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의 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을 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윤성옥 의원)

- 도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제정되어 운용 중인 조례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조문을 정비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시험절차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로 별정직의 사기진작을 도모
-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인력충원제도 개선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충청북도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심기보 의원)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기업·단체 등으로 확대해 보조금 및 행·재정적 지원과 세자녀 이상 가정에 공공시설 이용·문화행사 등에 참여 시 우대조항을 신설
- 저출산·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내 기관·기업체 CEO로 구성된 포럼운영 신설과 일부 내용 수정

전국 최초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조례」 제정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교육격차 해소 등 우선지원

충청북도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제31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내 농·산촌지역의 작은학교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내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이 확대·강화돼 폐교·통폐합의 위기 극복과 지역사회 문화교육의 중심지로 발전하

는데 크게 기여하게 됐다.

주요내용은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수 60명 이하 또는 6학년 이하인 작은학교 중 지역 공동체의 유지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초·중학교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범위에서 우선지원 ▲교육감 및 교육장은 작은학교가 적정규모학교

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분담 ▲작은학교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장은 공모제로 교사는 희망교원을 우선배치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 우대방안 마련 및 주거편의 제공 등이다.



5분 자유발언

“작은학교 살리기 앞장서야”



장병학 의원

지난 5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초등·중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라는 기준을 세우고 인위적으로 학생 수를 줄여나가 장기적으로 통폐합 시킨다는 정부

의 강한 의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과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몇 명 이상으로 하겠다는 계획보다 학급당 학생 수를 몇 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선진 교육계획 정책으로 먼저 전환해야 열악한 농산촌의 마을까지 살아남습니다. 이제라도 경제 논리를 떠나 작은학교가 지역사회 문화 활동의 장이 되고 공동체적 학습문화가 구축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하여 도시와 농산촌의 학교가 균형 발전하는 정책으로 지향돼야 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작은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해 놓고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논리보다 교육 본질을 추구하여 작은학교를 살리는 교육지원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충북도의회와 기초자치단체, 충북도청, 학부모, 동문, 지역사회가 앞장서 주기를 갈망합니다.

“경자구역 지정에 총력을”



김양희 의원

먼저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서입니다.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청원군민들의 찬반 주민투표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청주·청원 통합 찬성단체도 활동하지만 청원군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단체가 조직적으로 반대활동을 벌인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도 물론 많이 강구하고 있겠지만 통합이 무산될 경우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청원군민 주민투표일인 27일 이전에 공개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입니다.

충북도가 신청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사실상 무기 연기된 것으로 알려져 실망이 매우 큰데 더 큰 문제는 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치밀한 논리 개발과 보강을 통해서 충북 경제자유구역이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도의회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도의회 집행부 견제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재갈 훈령 60호는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본 의원은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재갈 훈령을 방관할 정도로 제 자신 강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나쁜 규정을 철회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단양소방서 설치 시급하다”



김희수 의원

단양군은 현재 1천만 관광객과 방문객의 안전과 수려한 자연경관, 선사유적의 보존을 책임질 수 있는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방활동을 전담할 소방서가 없습니다.

물론 인근 제천소방서에서 단양지역을 관할하고 있지만 단양군은 780.67km²의 넓은 면적과 83.7%가 험준한 산악지대로 화재발

생시 접근성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단양은 남한강, 소백산, 도락산, 제비봉, 황정산 등의 자연조건으로 관광과 휴양 그리고 레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며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에는 기도에 정진하는 수 천명의 신도 등 연간 200만 명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으로 하늘·강·산·철도·도로 등 모든 곳에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재난 및 수난사고 발생시 대처 능력이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함께 중점 관리해야 할 고층아파트, 한일·성신 등 대형 시민트사, 광산의 위험물저장·처리 시설 등 소방대상을 또한 739개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양군에 소방서 설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역책임 소방행정을 위해 1사·군 1소방서 설치 추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저수지 관리예산 편성을”



정현 의원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대형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건설된 댐에 대한 안전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안전도 진단과 거동 분석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용 저수지나 중소형 댐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결국 저수지 붕괴라는 막대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저류되었던 많은 양의 물이 댐의 파괴로 짧은 시간에 하류로 방류되면 하류지역에 심각한 재산과 인명의 피해는 물론 막대한 양의 토사와 돌무더기들이 세굴, 운반, 퇴적되어 수로와 계곡의 지형 및 생활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점검과 관리 방안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와 함께 청원군에 위치한 저수지(소류지) 14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50%이상 개보수와 준설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소규모 저수지(소류지)는 영농을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재해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향후 가뭄대비 농업분야 종합대책도 함께 수립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수도권규제완화 중단해야”



이수완 의원

본 의원은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하여 현 정부 규제완화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 정부가 ‘경쟁과 효율’의 논리를 적용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함으로써 지난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국토균형발전정책’의 기간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을 허용하고 인천광역시 일부지역의 과밀억제 권역을 성장관리 권역으로 환원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고 위험한 탁상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의 강력한 공동대응을 위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합니다.

둘째, 도는 비수도권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도의회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범국민 차원의 공동대응에 나서 줄 것을 관계자 여러분과 지역주민께 간곡히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박람회 통합시 축제로”



장선배 의원

오는 27일 청주·청원 통합여부를 최종 결정짓는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저는 주민투표 결과 통합시가 탄생할 경우 내년 5월 개최되는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가 청주·청원 통합을 대내외에 알리는 축제가 되도록 하자는 제안과 함께 그동안 노출된 문제점 보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최 시기가 내년 5월로 청주·청원 통합의사 확정 이후 우리지역에서 열리는 첫 번째 대규모 국제행사가 됩니다. 이에

저는 박람회 본래의 목표에 더해 청주·청원 통합 홍보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노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 박람회 개최 장소가 변경되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등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다는 평가입니다.

둘째, 국고 예산확보 부문입니다. 셋째, 계획의 짜임새와 콘텐츠입니다. 넷째, 도청 전체의 협력 강화와 도민들의 관심도 제고 부문입니다. 다섯째, 박람회 개최 후 시설물의 활용방안과 관련기업 유치 등 산업화 전략을 사전에 정밀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박람회 성공을 위해 앞에서 말씀드린 청주·청원 통합 내용 도입을 검토하고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극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카자흐스탄 대표단 방문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의회 무카셰프 의장외 대표단 6 명이 5월 17일 도의회를 방문해 양국 지역간 행정, 문화,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교류방안을 논의했다.



▲ 외국인 근로자 도정질문 방청

외국인근로자들이 5월 9일 이광희 의원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을 촉구하는 도정질문을 방청했다.

세종시 정상추진 및 발전 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전방위적 노력으로 핵심 목표 달성, 본회의 보고

충청북도의회 세종시 정상추진 및 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는 6월 22일 제311회 임시회에서 '세종시특위 활동결과 보고 의 건'을 채택해 본회의에서 보고함으로써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세종시특위는 지난 2010년 9월 16일 제294회 정례회에서 세종시 건설의 조속 추진과 충청북도의 상생발전을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

하기 위해 일곱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특위는 세종시 법적 지위 등을 담은 「세종 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세종시 건설에 도내 건설업체의 참여



가 가능하도록 길을 여는 등 핵심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붕괴위험지역 현지방문**

건설소방위원회는 5월 17일 하석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충청북도·도교육청 결산검사**

충청북도의회는 5월 23일부터 6월 11일 까지 20일간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해 32건의 지적사항을 찾아내고 내 실있는 대책강구를 요구했다.

▶ **청주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의정체험**

충청북도의회는 5월 29일 차세대 정치지도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올바른 이해와 의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주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생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 중국 호북성 정부 대표단 충청도의회 방문

6월 25일 중국 호북성 양송 정치협상회의 주석 등 10여명이 일행이 양국 지역 간 우호증진 교류협력을 위해 충청북도의회를 방문했다.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김형근 의장이 6월 15일 국가보훈의 달을 맞아 전상군경 민경기씨와 전상군경유가족인 나정숙씨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 소년체전 선수단 격려

김형근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5월 27일 경기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41회 전국 소년체전의 충북선수단 경기장을 방문해 선수, 지도자, 임원들을 격려했다.



군지역 도의원으로써 느낀 의정활동



유완백 의원(행정문화위원회)

제9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2년이 흘렀다. 나는 지난 2년간 보은군민의 대변인이자 도의원으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왔는지를 되돌아보게 된다.

2년전 보은군민을 대변하고 보은군의 발전과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속에서 도의회에 발을 내딛었다. 나의 30년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보은군민 아니 더 나아가 충청도민을 위한 봉사의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보다 나은 보은군과 충청북도를 만들어 보고자 하였다.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였고, 도정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충실히 하기 위해 노력한 2년이였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내 나름대로의 열정과 노력을 다한 의정활동이었지만 가슴속 한편에는 아쉬움과 함께 반성이 남는 의정활동이었다. 그중에 한가지 아쉬움은 군지역 도의원으로써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충북의 균형발전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지역면적을 보면 군지역이 전체비율의 72.82%로 시지역보다 3배나 넓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각종 산업경제 기반시설은 시단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청주·청원 지역은 도의 13.02%의 적은 면적임에도 전체 인구의 52.56%가 집중되어 살고 있으며, 산업경제 기반시설 또한 이곳에 몰려있다. 이는 우리 도에 있어서는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원인임과 동시에 나머지 10개 시군에 대한 보다 균형발전전략을 시급히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다. 본의원은 이러한 지역불균형해소를 위하여 충청북도가 지역균형정책을 집행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1명의 도의원 힘으로써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끼곤 했다.

또다른 하나는 광역의원으로서 도의 발전도 견인해야 하지만 지역의 대표로 지역주민인 보은군민을 대변해야 하나 1명의 도의원으로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인구 상하한선에 따른 선거구 획정은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라 2010년 선거부터는 충북의 보은, 증평, 괴산, 단양군의 도의원 수는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과연 도의원이 인구수에만 비례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지방의원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은 발로 뛰는 의정활동이다. 청주시 도의원에 비하여 보은군 도의원은 4배에 달하는 면적을 발로 뛰어야 하는 것이다.

도의원 수의 감소는 단순한 의원 수의 감소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이는 다시 지역의 재정지원 감소로 이어졌다. 보은군에 지원되던 소규모주민생활사업비 역시 반토막이 난 것이다. 이는 열악한 군지역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사유가 되었다.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보람도 있지만 아쉬움도 크다. 이제 남은 2년간의 의정활동을 위해 다시한번 나의 신념과 다짐을 다부지게 되새겨본다. 이제 남은 2년간의 의정활동은 지난 2년간 이루지 못한 의정활동에 도전하며, 보다 나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도의원으로써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